

계엄군 민간인 보복 살인...“오인 사격 주장은 왜곡”

80년 5월 그날의 진실 되짚는다 2 광주 송암동 집단 학살

스카이데일리, 왜곡·편향 보도
군 오인사격 ‘게릴라 전술 탓’ 주장
조사위 진상조사로 ‘군 과실’ 결론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9명 고발

1980년 5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시민군 오인 사격’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왜곡 주장이 제기되면서 광주 송암동 일대에서 벌어진 11공수여단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여단은 오인교전 직후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졌는데, 일부 극우매체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왜곡·편향을 근절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6월 양민학살 사건 연루자인 최웅 전 11공수여단장과 62·63세대 소관부 및 사병 등 계엄군 9명을 집단살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24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와 오인교전을 벌인 뒤 송암동 주민들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송암동 학살 사건’은 1980년 5월 24일 계엄군이 광주 외곽 봉쇄작전 중 송암동 일대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사건이다.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의 단순한 오인 사격이 아닌 무차별한 총격과 보복 살인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5·18 직후 11공수여단이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에도 시민군으로 오인해 사격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당시 선두 529호 장갑차 캘리버 50을 담당한 김 상병은 “효천 삼거리 도착 전 나주에서 광주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위대 차량과 무장 시위 대원을 목격했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기관총 사격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529호 장갑차의 발표이후 11공수여단 전체로 총격이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효덕초등학교 4학년 전재수군과 전남중학교 1학년 방광범군 등 무고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11공수여단은 오인 교전 이후 인근 민가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무장 시위대 색출을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하고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는 일성마을에서 권근립, 임병철, 김승후씨를 총살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근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보복 살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군 오인 사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월 금남로 일대에 5·18특별판을 배포하며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신문 12면에는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군이 당한 것’이라는 제목의 왜곡 기사를 보도했고, 무장한 시민군이 군 무전을 도청하고 위장 제보를 통해 계엄군 간의 교전을 유도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시민군이 계엄군으로 위장해 접근하거나 매복 공격을 통해 교전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담았고, 교전 당사자와 주민 목격자의 증언이라며 편집된 내용을 제시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송암동 사건 당시 계엄군 간의 오인교전은 있었으나, 사전에 이동 경로 및 전술적 이동 원칙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군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는 또 교전 과정에서 11공수여단이 무장 시위대로 오인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교전 이후 민가 수색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연행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조사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송암동 학살 사건은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와 폭력으로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스카이데일리가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군이 당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며 왜곡 보도를 일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유족과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는 악의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일부 극우 정당에서 이러한 왜곡된 보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도 5·18 왜곡과 편향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할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광주시교육청 5·18민주묘지 참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7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들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5월 영령들의 송고한 넋을 기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제주항공 참사...법률지원단 ‘사고 책임자’ 고소

‘국토부 조사위 독립성 보장’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역 법조계가 유가족들과 함께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고소를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

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할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국토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구조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항적조사와 목격자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는 조사 의지의 부재이자 진실 은폐 의혹을 강화할 뿐이다”며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환준 기자

“자산 매각 중단·영업양도 방식 고용 보장해야” 완도 리조트 “감지기 미작동”

위니아딤채 노조, 희생방안 촉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7일 자산매각방식 중단하고 조합원의 고용이 보장되는 영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위니아딤채의 희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위니아딤채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박영우 회장의 경영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지만, 담채와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며 “위니아딤채는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생 기간 1년 반 동안 구조조정, 임금 삭감, 체불 임금 변제율 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감수하며 매각 성사를 위해 대폭 양보했

다”며 “자산 매각은 고용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담채라는 회사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둘러 자산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산과 다를 바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양도·양수 방식의 매각을 통해 담채의 이름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담채는 대한민국 최초의 감지냉장고이며, 단순한 제품을 넘어 감지 문화를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노동자들은 담채를 만들며 청춘을 바쳤고, 담채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존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딤채 매각 협상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투숙객 가스중독 사고 당시 리조트에 설치된 가스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 4층에 설치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리조트에 설치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일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조트 측이 건전지를 제 때 교체하지 않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전지 잔여량 등을 감청하고 있다.

지난 5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최규국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